

민주당, 수박색출 작업 등 ‘총체적 난국’… 출구전략 고심

(민주당 내 보수인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됐지만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능성 농후
지지율 하락, 내년 총선 패배 우려
비대위 체제 전환 등 목소리도

총체적 난국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누누이 지적받았던 ‘사법리스크’ 현실이 됐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부결됐으나, 대거 민주당 이탈표가 나오며 후폭풍을 일으켰다. 비(非)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은 쌍방울 대복송금 의혹,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하고 있어 추가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극성 지지층은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박(민주당 내 보수 인사) 색출 작업’에 들어가면서 내부 갈등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자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계기운동본부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 수박은 같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이다. /뉴시스

증폭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직을 맡은 친명계 의원실에 들러 “개딸(개혁의딸·친이재명계 지지자)들에게 문자 좀 보내지 말라고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까지 출석하는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당의 위기로 비춰져 지지율 하락과 내년 5월 22대 총선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 2022년 대선과 지선까지 대항선거에서 연전연패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되

기 전까지 여론의 흐름을 뒤집을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만약, 이 대표가 지난주부터 출석하고 있는 재판 1심 결과가 무죄로 나온다면 검찰에 타격을 주고 숨 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이 비교적 빨리 진행되는 편이기 때문에 재판 중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로 꼽힌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범위법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탄압 등 부정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지고 이에 당의 내분이 커지면 당헌 80조의 적용 잣대도 달라질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경우, 총선

을 앞두고 당의 내분을 증폭할 수 있는 인사보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형’ 인사가 당을 이끌어야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가 계속 임기를 이어가면서 중도총을 확장전략을 쓰는 길도 걸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77.77%를 득표해 민주당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당 대표가 됐다. 그만큼 지지층이 견고하다는 의미다.

또한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내부 검찰에 대한 반감도 팽배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매일 언론에서 검찰발 보도만 나오는데, 무엇이 실제적 진실인지 모르겠다. 피의사실공표는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안을 발의하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대정부·대여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前대 흥행... 높은 투표율 ‘아전인수’ 해석

투표 첫 날 47% ‘역대최대 투표율’

김기현 “尹 정부 성공위한 강한 의지”
안철수 “당대표, 12일에 확정돼야”
천하람 “윤핵관들의 심판 투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높은 투표율에 관심을 보였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면서다. 투표 결과에 따라 과반 득표로 당선되거나 결선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당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표 후보는 5일 전당대회 투표율이 높은 상황에 대해 “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합작이라도 한 것처럼 전당대회를 진흥당으로 만들거나 내거티브로 일관한 데 대한 당원들의 당심이 폭발한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김기현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YPT 청년정책 콘테스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안정적인 것으로 확고한 리더십 위에 세워놓을 사람인 김기현을 적극 지지해야 당이 안정 속 개혁을 이룰 수 있겠다고 당원들이 판단하고, 그것이 투표율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될 자신이 있는지 질문에 김 후보는 “1차 과반을 목표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같은 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투표 첫날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높은 투표율의 원동력은 우리 당이 내부 분란을 끝내고 안정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치단합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라는 당원들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높은 투표율’에 대해 안철수 후보도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YPT 청년정책 콘테스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원들의 속마음이 모인 집단지성이 투표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당원들의 뜻은 네 가지”라며 ▲대선 승리는 대통령과 몇몇 사람들 힘만으로 된 게 아닌 것 ▲대통령실과 몇몇 사람이 당과 당원을 존중하지 않고 수직적 관계로 만들려는 것 ▲대선에 공인 있는 사람을 내치는 것 ▲총선 승리 목표에 맞는 당 대표 적임자 선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당 대표는 3월 8일이 아닌 12일에 확정돼야 한다. 9일 안철수·김기현 후보 양자 토론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우리 당도 총선 승리를 위해 대표 리스크가 없는 게 필수”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저를 결선투표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천하람 후보 역시 같은 날 경남 창원 마산부림시장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천하람 태풍”이라고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저희는 개혁세력이기에 조직표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모바일 투표에서 굉장히 높은 투표가 나왔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개혁을 바라는 젊은 세대, 지금까지 윤핵관(윤석열 대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자기들 것인 양 가짜 주인공 행세 할 때의 심판투표라고 본다”고 했다.

천 후보는 높은 투표율로 자신이 안 후보를 제치고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천 후보는 “이번에 안 후보를 꺾고 결선에 진출한다면 지금까지의 천하람 돌풍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천하람 태풍이 돼 김 후보는 물론이고 그 옆에 있는 윤핵관까지 한 번에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4~5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 선거인단 83만7236명 중 39만7805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47.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바일로 투표하지 않은 책임당원은 6~7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ARS 투표로 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 발표된다. 다만 당 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으면 상위 2명 결선투표에서 승자를 가린다. 결선투표는 3월 10~11일 이틀간 모바일·ARS 투표를 치른 뒤 12일 발표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尹, 美 방문시기·단계 등 매듭 지을 것”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미국 출장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사진)이 다음 달 미국을 국민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방문 시기 그리고 방문 단계, 수준 등에 관해서 이번에 가서 매듭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5일 오전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미 행정부 관계자라든지, 학계 인사들을 만나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역내 문제, 한반도 문제, 글로벌 아젠다 등 다양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미국 출장

보좌관이라든지, 미국외교안보당국자를 만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 보조금 등 경제 현안도 논의하느냐고 묻자 “경제안보 현안, IRA를 비롯해 반도체법들이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 관계이긴 하지만 경제안보에 구체적인 어떤 차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이라며 “마이너스를 최소화하고 플러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정희 기자 pathfinder@

“피해자 동의 없는 외교의 또 다른 불씨”

“강제징용 해결책 마련” 일본에
민주당 “尹 대통령 의지 반영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 소송 해결책을 마련하면 일본 총리가 식민 지배를 반성하겠다는 소식에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할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입장문에서 “정부가 내주 초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성의 있는 호응’ 요구에도 일본 정부가 꿈쩍도 안 하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선

제적으로 해법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차 변제안’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이 해법의 골자”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지렛대 삼아 해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